

시민 교통비 부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

‘광주G-패스’ 시행 8개월

月평균 버스·지하철 이용건수 1.8% ↑

도입 이후 이용자도 2.4% 증가 효과

姜시장 “사회적 약자 교통복지 역할”

광주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광주G-패스’가 시행 8개월 만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이용건수는 총 8천104만여건(환승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7천960만여건보다 144만여건(1.8%)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1월 908만여건, 2월 905만여건, 3월 1천75만여건, 4월 1천101만여건, 5월1천118만여건, 6월 970만여건, 7월 1천38만여건, 8월 984만여건으로 월 평균 1천13만여건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카드 장수)은 720만1804명으로 전년 동기(702만9천818명) 대비 2.4%(17만986명) 늘었다. 월 평균 이용자는 90만101명이다.

이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776억4천892만원으로 전년 동기(769억9천3만원) 대비 0.9%

인 6억5천889만원 증가했으며 월 평균 이용 금액은 97억611만원이다.

월 평균 광주지역 대중교통 이용자 90만여명이 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1천13만여건 이용하면서 약97억원의 교통비를 지출한 셈이다.

특히 ‘5·18기념주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6월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월 평균 이용자는 2.8%, 이용건수는 2.5% 증가해 증가 폭이 더욱 커진다.

광주G-패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확연히 줄었다. 광주G-패스는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할인하고, 성인은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의 20-64%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제도다.

올해 1-8월 어린이는 월 평균 2만5천781명이 1인 당 월 2천554원씩 교통비를 지원받았고, 청소년은 월 평균 9만2천989명이 1인 당 월 5천396원씩 할인받았다.

‘광주G-패스’와 연계된 ‘K-패스’의 광주지역 가입자도 대폭 늘었다. 가입자는 지난해 말 4만5천749명에서 올해 8월 말 11만4천470명으로 8개월 만에 6만8천721명(2.5배)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급을 받은 시민은 6만5천44명이며, 1인 당 월 평균 1만4천30원을 돌려받았다.

광주시는 ‘광주G-패스’를 이용하는 청년(35-39세)에게는 10%,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1

1%를 ‘K-패스’보다 더 환급해주고 있다. 대상자는 3만8천174명으로 이 중 2만6천333명이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1인 당 월 평균 7천347원씩을 더 지원받았다.

광주시는 향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완료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G-패스’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G-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광주G-패스’ 정책에 동참해 더 많은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서구 풍암 파크골프장 강제집행

광주 서구청이 풍암동 금당산 내 무단 조성된 파크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 15일 구청 직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 전남에 집중

여수 해상국립공원 ‘월동장’ 실효성 논란
문금주 “기후위기시대 법이 벽돼선 안돼”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202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

는 총 42만2천마리, 피해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남에는 여수 해역 1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반비 부담, 이동 중 사육생물 폐사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실제 여수 해상월동장 지정 이후 이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가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국립공원 규제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저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에 제약이 걸려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한경부와 협의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의 생존과 해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 여행금지 발령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6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퇀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며, 바벳시와 포이펫시도

범죄단체들이 많이 포진한 곳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시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연합뉴스

3대 역사기관 10년간 여순사건 연구 ‘0’

김문수 “극우 역사관 학교현장서 판저”

국내 3대 역사기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의 최근 10년간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에 대한 연구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국내 3대 역사기관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학술연구, 보고서 등은 10년 동안 1건도 없고, 겨우 학술회의의 1건이 개최됐을 뿐”이라며 “3대 역사기관의 무관심 속에 최근 여순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서울대가 주최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여순사건 주범 이승만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3대 역사기관으로 불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여순사건에 무관심하다 보니 왜곡된 극우역사관이

학교 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1면 ‘농어촌기본소득사업’서 계속

반면,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한 전남도는 2.4%만 분담하고, 전북도·충북도·경북도·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만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충청북도는 시·도에서 아예 지방비 분담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 인구감소 군 지역이 어느 시·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절반인 30%에서 60% 전액까지 달라지면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송미령 장관에게 “국비비중을 60-70%까지 높여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도와 군에서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광주 북구 주거지역 땅 평당330만원 급처분

-10미터 포장도로접 1,110평 / 전남대2,300미터거리-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사구 힘튼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CMYK